

② 제 17대 대통령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간담회 - 정동영 대통령합민주신당 후보

“PBS · 연금 · 정년 과학기술계 3대 불안 혁파”

글 | 서금영 _ 동아시아연구소 기자 symbiosus@donga.com

정동영 대통령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 연금 · 정년 같은 과학기술계 3대 불안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선진국은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높고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나라”라며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는 우리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위기다”라고 말했다.

PBS는 소 뿔 교정하다 소 죽인 꼴

정 후보는 “우수한 청소년이 의대 · 한의대 · 치대를 먼저 채우고 공대에 진학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대로 10, 20년 계속 되면 대한민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정 후보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와 복지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공계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인의 사기와 복지를 어떻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일까. 정 후보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과제를 수주해서 자기 월급을 스스로 채워야 하는 PBS가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고 진단했다. 예전보다 보수가 나아진 과학기술인도 있지만 자신의 월급을 직접 벌어서 연구 활동을 해야 한다면, 이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후보는 “PBS는 마치 소의 뿔이 조금 삐뚤게 생겼다고 이를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 꼴”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원의 월급에서 20%는 연구 과제의 인건비로 충당하되 80%는 정부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분

야 비중을 2012년까지 연간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와 관련해 그는 “인터넷 포털인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창업 6년 만에 벤처기업 가운데 세계 최고가 됐다”며 “21세기가 요구하는 것은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자유분방함”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구글에 가보니 수만~수천평 되는 회사 내 어디서든 10m 거리면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었다”며 “머리를 짜내라’가 아닌 ‘가슴을 짜내라’ 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한정된 예산을 놓고 출연연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20년 뒤 ‘먹거리’ 생각하는 지도자 될 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도





질의에 나선 정봉영 고려대 교수(위)와 채영복 과총회장(왼쪽)이 정동영 후보에게 '공약제안서'를 건네주고 있는 모습

언급했다. 정 후보는 “운하 파지 말고 달나라 가자”며 “항공우주 분야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수십만 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 후보는 “얼마 전 대한민국 공군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송기를 수입해왔고 중국도 내년에 여객기를 출시한다”며 “항공우주 분야에서 뒤처지면 과학기술 강국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와 조선의 부품보다 항공기의 부품은 100배 이상의 정밀도가 필요하다”며 “부품 소재의 경쟁력이 우리 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 후보는 “1970년대 유신시절 테모도 하고 정경에 붙잡혀 구치소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며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많이 미워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모태가 된 KIST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둘러보면 20년 뒤 국민의 먹을 거리를 생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비록 독재와 억압을 사용했지만 그 시대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정조’의 현장형 리더십 발휘할 것

간담회 참석자의 질문도 이어졌다. KAIST 산업공학과 성장섭 교수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는 복지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통일·경제 분야도 과학기술 개혁에 맞는 조정이 이뤄져야 하

지만 실질적인 최고 의결 당사자에서 과학기술인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남북경협이나 북핵문제는



정보통신,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하지만 사회 각계로부터 과학기술인이 소외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조선시대 중흥을 이끈 정조대왕의 위대함은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어떤 백성이든 징을 치면 왕이 직접 하소연을 들었다는 점”이라며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남대문까지 가는데 한 나절이 걸릴 정도로 정조 대왕은 ‘현장형’ 리더십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매주 토요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석학들을 모시고 현대판 ‘경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애국심과 청사진을 잘 들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훌륭한 인재, 원로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는 “원로들과 격주로 만나 과학기술 현안, 정책에 대해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채영복 과총 회장이나 이현구 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등과 함께 “어떻게 과학강국, 교육강국을 만들 것인가”를 배우고 묻고 할 생각이란 얘기가. **ST**

정동영 후보 <기조연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초청받아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 박수는 첫 번째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지성인 과학기술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이과 친구들이 부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인문학인 국사학과를 나왔는데 그게 1970년대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지난 40여 년 동안 인문학을 하시는 분도 기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부러워했던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합니다.

한 나라의 경영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과학기술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 치고 과학기술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죠. 과학기술 선진국을 다른 말로 하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과학기술인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1960년대 그 황무지에서 해외 과학기술두뇌 유치사업으로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어 줄 것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의과대학, 한의학 대학 다 채우고, 치과대학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공과대학에 가는 이 엄연한 현실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과연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사기나 복지를 최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4군데의 상임위원회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보, 교육, 과학기술, 재정경제 위원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무진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를 갖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일전에 제가 지방선거에 참패한 후 충전을 겸해서 독일에서 몇 달간 살면서 그곳을 참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전 국민의 90%가 중산층이었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조사 800만 명(10%)을 제외하고 7천만 명이 수도와 지방도시에 골고루 어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

니 근 18년 만에 동독의 삶이 우리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왔지만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격차를 벌이고 성장경쟁력을 꺾는 성장이 아니라 좋은 성장, 행복한 성장, 세계 중심이 되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정동영이 갖고 있는 이 차별 없는 성장에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의 경쟁력, 사람의 효율을 올리고, 사람의 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2011년부터 줄어듭니다. 토지도 비쌉니다. 여기서 경제 3요소를 확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생산성의 효율을 높여야 하는 것인데, 그 효율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효율과 사람의 품격과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전략과 함께 특히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IT의 황무지였지만 10년 만에 IT강국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과학기술 강국도 정말 5년, 10년이면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의 그 막대한 현실 속에서도 지도자의 의지와 좋은 전략으로 우리가 10년 만에 GDP 12%, 수출 34%를 차지하는 IT를 키웠듯이, 이제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는 역시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에 관한 토론자리는 아니니까 그 표면만 말씀드리면, 사실 5년제 대통령제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 겨우 바꿀 수 있는 게 입시제도 땀질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업무파악하고, 브리핑 받고, 계획 세워서 한 2~3년만 일하면 임기를 마칠 준비를 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모두 걸려 있는데 이렇게는 교육혁명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저는 2008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고적 대협약의 해'로 규정하고 1년 동안 전국의 선생님, 학부모, 학장, 전문가, 시민패널, 여러 정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학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대학입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몇 과목이나 가르쳐야 하는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일산학원가에 갔었습니다. 밤 10시에 구름같이 학생들이 몰려 오고 있었습니다.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10시에 학원에 등원한 학생들은 12시 반에 끝났습니다. 10층짜리 대형학원 건물에 빼곡하게 학생들이 차있는데 고3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년부터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학원 가득 방마다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며 젊은 사고로 한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서울 중심의 경제 속에서 그만큼 기적적으로 왔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일 급체계로 발전해왔는데 압축과 불균형 성장을 해온 것이죠. 어쨌든 그 성장전략은 맞아 떨어졌지만, 부작용도 여럿 있죠. 중앙과 지방 또 양극화문제 등을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한대로 확장해야 합니다. 역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선 준비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 두 가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개성공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얼어붙어 있었던 50년의 동토의 왕국으로부터 10년 동안 해빙 열음이 녹았고, 이제 열음이 녹은 위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 합니다. 즉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에 공동유원단이 갑니다. 서울역에서 모어서 기차를 타고 평양역을 지나게 됩니다. 저는 평양역을 지나가는 기차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만주철도, 몽골철도, 시베리아철도로 한국경제를 대륙으로 연결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로 갈 수 있는 노하우,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는 결국 과학기술로부터 나와야 하고 과학기술인의 왕성한 사기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PBS, 연금문제, 정년문제 등 세 가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PBS는 다른 것보다도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존중감, 그것부터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헌법정신입니다. 정년 후 연장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예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5년 전부터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좋으면 다

시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산은 작년에 100원 예산이었으면 올해는 110원입니다. 내년엔 120원입니다. 해마다 매년 누적대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각 부처 존재의 목적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연초부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예산 같은 경우 기준이 포장률, 4차선도로 비율 이런 것만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율을 얼마만큼 줄이겠다, 물류 운송 시간을 얼마나 줄이겠다는 등의 목표를 정해놓고 돈을 씁니다. 그래서 운송속도가 개선되었으면 굳이 더 이상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과학기술 예산 역시 이런 것에 의해서 10%는 절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사람에게 넣겠습니다. 출산, 육아, 초·중고 교육, 대학교육, 과학기술 등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돈을 집어넣겠습니다.

또 아까 경제영토를 넓히겠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평화배당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전제로 지금 50개 사단이 2050년이 되면 25개 사단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전력강화에 620조 원의 돈을 투입하는 계획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국방계획도 달라집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처럼 북한과의 관계가 휴전이 아니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지요. 한국은 중국과 적대관계였습니다. 1991년까지는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중국에 못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난주에 중국으로 오가는 비행기가 800편이었습니다. 그리고 70만 명이 지금 중국에 가서 돈 벌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역거래만 1천500억 달러입니다. 하루에 3천억 원씩 매일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죠. 15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전쟁이 끝나는 날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태어나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54년째 휴전체제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것을 50년 동안 또 가야하겠습니까? 지금 역사가 60년 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북한과 미국이 적대국에서 우방국 관계로 전환하려는 접촉과 시도가 일어나고 있던 말이죠. 냉전구조가 해체되었고 이제 북한중심으로 한 주변과의 적대관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틈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가져야 할 신념과 철학과 비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체제가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경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상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자유 왕래의 시대가 되는 거지요. 저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삶이 지난 60년과는 획기적으로 달라진 환경 속에서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는 과학기술 강국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쩌민 전 주석도 전기과를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13억 중국을 지도하는 공산당 정치부 9명 전원이 전원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저는 공대는 안 나왔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대출신 과학기술계의 원로들을 모시고 국가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토론하면서 과학기술계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시대에 있었던 과학기술 입국을 과학기술 강국의 시대로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질의·응답>

Q 정봉영 고려대학교 교수 : 앞에 교육을 말씀해주시면서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 후보는 이공계대학을 분야별로 특성화, 차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50개 분야를 선택하고 이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2012년까지 분야별 순위 세계 10위 이내 10개 진입을 목표로 삼겠다고 하셨고, 또한 분야별 세계 5위권 연구중심대학 20개를 육성하여 석·박사 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교육 재정을 GDP 6% 수준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31조에서 71조 원으로 증가시키고 중등교육의 과잉투자와 고등교육의 과소투자를 해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학부를 갖는 대학도 20여개는 있어야 조기 유학과 고급두뇌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교육 재정에서 얼마를 고등교육에 할당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디에 과잉투자되어 있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 올해 교육 예산이 30조 원이었는데요. 전체 예산 240조 원 중에 30조 원은 큰돈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전체 예산대비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GDP 대비로 하면 GDP가 올해 900조 원 쯤 됩니다. 지방자치에서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까지 포함하면 40조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GDP의 4.3% 정도입니다. OECD 기준으로 해서 우리보다 선진국들은 국민총생산에 6% 정도를 교육에 씁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의 효율을 높여겠다고 했습니다. 그 실천전략이 GDP 6%를 실

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GDP 6%를 실천하면 2012년에 약 7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성과주의 예산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여력을 가지고 1만 개의 학교(고등학교 2천 개, 중학교 3천 개, 초등학교 5천 개)를 선진국 수준으로, 세계 수준의 학교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급당 35명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바로 이 교육의 연장 속에서 과학기술 쪽에 돈을 아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조 원의 교육예산 가운데 대학에 지원되는 것은 4조5천억 원으로 10%가 좀 넘죠. 여기에 5조 원을 더 투입해 13~14%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이 특성화된 분야를 50분야 정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기준이긴 하지만 세계 200대 대학을 골랐는데 일본이 14개, 중국이 10개 들어갔는데, 한국은 3개 정도 쏘핍니다. 이렇게 해서는 일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학의 생명은 자유, 자율입니다. 적극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대학에 관해서 일일이 학생을 몇 명 뽑아라, 몇 명 줄여라, 뭘 가르쳐라 등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간섭하는 구조는 자유와 자율을 생명으로 하는 대학의 장점을 가로 막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뽑는 것에서부터 가르치는 것, 그리고 사람 만드는 것까지 대학이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을 가지는 과정에서 정책과 전략으로 만들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Q 성창섭 KAIST 교수 : 국정전반에 대한 경험과 또 가지고 계신 포부를 말씀해주셔서 공감이 가고 감명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이 선진국인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과학기술이 역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고 역사가 과학기술에 어울리면서 개혁이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거기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나라의 통일, 경제, 어떤 문제도 과학기술 개혁에 맞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분야에서 최고 결정권을 가진 과학기술자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사람에게 투자를 하겠다,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기는 보면 역할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라고 일단 맡겼으면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창의를 나오게 됩니다. 정치·경제·사회에 있는 분들이 인정해 주고 옹호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

와 사회 전반에 이미 병폐로 만연해 있는 과학기술 기피현상에서 국민전체의 과학기술 마인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의 정책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년문제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학자에 대한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도 정년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맞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우리 중요한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조차도 비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창덕궁 후문에 있는 규장각에 갔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조대 왕 때 창덕궁 후원에 왕립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서 조강, 주관, 석관 선비들과 함께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민생 경제에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곳입니다. 정조는 민생의 소리를 직접 들은 군주입니다. 격쟁이라는 제도는 조선초기부터 있었지만 활용은 정조가 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사람이 징을 치면 왕이 직접 그 소리를 듣고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리더십을 보였던 거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매주 토요일을 현대판 경연제도를 도입해서 한 주는 인문사회와 문학하시는 분들, 역사하시는 분들, 철학하시는 분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한국사회를 어떻게 좀 더 품격 있는 사회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를, 또 한주는 과학기술계의 원로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최고의 과학도사들을 모시고 어떻게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지를 묻고 배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훌륭한 인재 강국입니까 그 분들이 가진 나라에 대한 걱정과 애국심과 청사진을 잘 도와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초인적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 경험을 가진 원로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원로들을 격주로 만나서 과학기술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하면 저는 이것이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돋울 수 지름길이 있는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이공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저는 사실 여성과학기술인 대표로 나왔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육성법이 지난 정부에서 통과하

게 되면서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공계대학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 30%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책임직, 고위직에선 10%가 안 됩니다. 지금 과학기술인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전문인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웹페이지에서 잠깐 봤더니 와이즈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쓸모 있다’고 하셨는데 작은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 남성 위주로 짜여져 있는 사회구조, 위탁구조에서 이렇게 오시기 힘들었을텐데, 후배들은 좀 낫겠죠. 선배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길을 개척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성인력 전문인력을 전문분야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은 10년 전에 비하면 많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속도는 더 빨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2007년도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도 여성이고 공군사관학교도, 해군사관학교도, 경찰대학도, 사법시험도, 또 언론사에서 기자입시시험도 성적순으로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여학생입니다. 능력으로 경쟁하면 딸과 아들이 구별이 없다는 것이 각 분야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WF 세계경제포럼 같은 곳에서 보면 성의 차별, 격차를 130개 나라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가 97등이니까 거의 최소 등급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개선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후보 중에서 제일 양성평등적인 것으로는 제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Q 이종희 모다정보통신 회장 : 아까 ‘꿈을 이루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꿈을 가장 이루기 쉬운 것은 과학기술의 성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과학기술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 이런 취업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고, 지난 5년 동안 그냥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지난 5년간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 저는 오히려 지금 벤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10년 동안 하드웨어나 대기업의 경쟁력은 커졌는데 중소벤처와 소프트웨어가 약해지고, 사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빌게이츠 회장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 아마 대기업의 하청업체 사장으로 고만고만하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업계에 쓰던 방식을 IT업계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하청, 재하청해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하청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SDS, LG CNS, SK 등의 몇 개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나머지는 다 하청을 줍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을 적극적으로 IT산업의 특성에 맞추도록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런 하청, 재하청은 건설업계이나 맞는 것이지 첨단정보통신 쪽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스탠바이스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일반 박사를 뽑는 민간기업인데 작년에 약 100만 건의 기술평가를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있는지 평가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국시스템이 있고, 핀란드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은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10년 뒤인 2017년 중국은 달나라에 갑니다. 이태백의 후예가 달에 착륙합니다. 2020년에는 러시아가, 2025년에는 인도가 달에 기지를 설치하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가 자동차와 조선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항공우주분야는 노동집약산업입니다. 고액임금을 받는 수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여객기 항공시장은 브라질에서 만들거든요.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를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왔습니다. 중국이 내년에 여객기를 수출합니다. 자동차와 조선의 부품보다 항공기의 부품은 100배 이상 정밀도와 정확도, 신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공우주분야에서 나오는 부품소재의 경쟁력이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정부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우주산업을 전략분야로 만들겠습니다. 운하를 파면 땅 파는 일자리밖에 안 나오지만 항공우주분야는 다릅니다. 중국이 탐사위성 쏘는 데 2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탐사위성도 쏘아 올릴 것이고, 한국 사람도 달나라에 여행할 수 있는, 그냥 재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하고 한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술과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Q 조성재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캐치업 패러다임의 성장 동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합니다.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여서 계속 가면 괜찮은데 빠져나와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결국 과학기술인데, 중국은 굴뚝 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기반한 첨단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기술은 다른 나라를 압도해서 다른 나라가 도저히 넘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식에 기반한 다른 첨단 과학기술도 압도하려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있어야 하고 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구개발 역량은 미국의 1/100, 중국의 1/20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우수한 박사 5천 명을 포함하여 1만 명의 준비된 인력이 있는 출연(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국정운영의 기회를 주시면 아까 말씀처럼 매주 대한민국의 원로 석·박사님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지혜를 빌려서 좀 더 품격 있는 나라, 과학기술강국, 교육 강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197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유신시절에 데모해서 잡히기도 하고 해서 박 대통령을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서대문구치소에도 가고 고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덕정보통신연구원의 CDMA, 한국전자 증전자 교감기, 컴퓨터 등 20년 뒤 먹고 살거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독재자이고 억압했지만 미래의 먹거리에 관련해서 고민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시대는 찬반을 토론할 수 있는 정부의 지도자를 가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기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기술 밑거름이 되는 1만 명의 석·박사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기업의 연구소가 커졌지만 이분들이 그 동안 헌신하고 노력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도전한다면 미국, 일본과 과학기술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인력, 준비된 과학기술 두뇌들과 동반자가 돼서 사기도 복돋우고 그분들의 열정과 혼신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㉓